

# 태조 이성계 관광자원화 제안

박용근 도의원, 역사 활용한 문화테마벨리 조성 제안 지역관광산업 발전 신호탄

전북도가 태조 이성계를 활용한 역사문화테마벨리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은 26일 “유럽과 일본 등 문화관광의 선진국들은 역사와 설화를 소재로 한 테마관광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1392년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를 앞세운

관광자원화에 앞장설 것을 주장한 것이다. 조선 26명의 왕 중 전북 땅을 밟고 다녔던 왕은 이성계가 유일하며,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과 설화가 존재하는 시군을 살펴보면, 전주(오목대, 이목대, 경기전), 남원의 황산대첩비, 임실의 상이암, 순창의 만일사, 완주의 위봉산성 행궁터, 진안의 마이산 은수사, 장수의 뜬봉샘과 용계리 등이 있다. 박용근 의원은 이러한 도내 시·군들을 이성계 역사문화벨리로 묶어서 이성계 역사테마로드 및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해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1박2일 여행코스로 개발한다면

전북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성계 역사박물관 건립, ‘태조 이성계 축제 개최 등도 함께 제안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책 문화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5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안동은 선비문화수원원, 선비순례길 등 ‘선비문화’를 통해 문화산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근 의원은 30일 폐회하는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할 예정이 다. /김진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경선을 통과한 왼쪽부터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후보가 노용래 중앙당선관위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민주당 당대표 선거 윤곽 나왔다

김진표·송영길·이해찬 3파전... 내달 25일 최종 선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영길·이해찬(기호순) 의원이 다음달 25일 예정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최종 3인의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진행했다.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 8명 중 본선에 진출할 3명의 후보를 추려낸 것이다. 투표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등 중앙위원 440명이 참여했다. 투표자수는 405명, 무효투표수 0표로 92%의 투표율을 보였다. 1인1표로 실시됐지만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해찬 의원은 후보 8명 가운데 출마선언이 가장 늦었음에도 당내 최다선인 7선 의원임을 내세우며 ‘내세론’의 중심에 섰다. ‘경제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앞세운 김진표 의원은 중진으로서 당내 조직력을 확실히 구축했음을 증명했다. 송영길 의원은 유일한 호남출신임과 동시에 지난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던 점이 이번 당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3인방은 본선까지 열심히 해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김진표 의원은 예비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8월25일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정당의 당 대표를 만드는 데 우리 당원동지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제가 2년 전 이곳에서 컷오프 된 아픔이 가시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본선에서도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찬 의원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나중에, 일요일에 정식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을 아끼며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예비경선 전 뉴시스 취재진과 마주했을 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예비경선에 참가했던 이종걸·최재성·이인영·박법계·김두관(선수순) 의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뉴시스

##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전달’ 1심 무죄

검찰, 결심서 재판부에 징역 3년·벌금 2억원 요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

효가 만료된 이후 기소됐으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해왔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제가 한 일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안 하겠다”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된 점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한 벌금형에 대해서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 “계엄령 문건 관련자 엄중 책임 물어야”

문 대통령, 기무사 개혁 TF 속도... 문제의 본질 '진실' 규명 철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

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전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도의회 여결위, 도민안전실·농축수산물국 등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2)는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전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는 도민안전실, 농축수산물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쉼터, 그늘막 등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올리는 폭염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박용근 위원(장수)은 최근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도의 피해사태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도에서도 라돈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응책마련을 요청했다. 홍성임 위원(민주평화당, 비례)은 이번 추경에 요구된 농축수산물국 소관 예산 중 지난해도 편성된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질타하며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보조된 예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소중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김중식 위원(군산2), 문승우위원(군산4)은 군산지역의 김양식업과 관련하여 황백화 현상 등 김양

식업의 피해사태 방지 및 김가공공장 활성화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경제를 감안하여 어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1)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어항·수산기술연구소 내진성능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수산업관련 시설물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하게 내진보강이 이루어져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 최근 수년간 농업 보조금의 대부분이 대규모 영농법인 위주로 배분이 이루어 졌다며 정작 보조가 필요한 소농인 등은 보조금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또한 이 때문에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 질타하며 농업보조금 전반에 걸친 점검 및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유한회사 영지건설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